



지방 環境支廳, 道別 설치가 바람직하다

—전북과 충북에도 지청 설립을—

金煥起 / 전북대학교 教授

李重煥의 擇里志와 和蘭人 하멜의 표류기에 의하면 조선조시대에는 서울, 평양, 전주가 한국의 3大도시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재고해보면, 전주는 충청북과 전남북을 포함한 우리나라 서남해 지방을 지배한 전통과 지리적 배경을 안고 성장해왔다.

5·16혁명 후 정부에서는 1963년 건설부에서 세운 국토건설 종합계획 大綱에서 우리나라 국토상에 구성되어 있는 권역을 개괄적으로 개발하여 단일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산맥을 경계로 묶어서 중부권역, 호서권역, 영남권역, 관동권역 및 호남권역으로 5대별 하고 전북은 그중 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발전되도록 구성하였다.

그후, 1971년에 시작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는 국토이용 관리의 효율화, 개발기반의 확충, 국토포장·자원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민생활 환경의 개선등을 목표로 전국을 균형 개발하고자 우리나라를 水系別로 한강유역권, 금강유역권, 낙동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등 4대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4대권을 다시 兩分하여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제주권 등 8중권으로 하여 각 권역마다 주기능을 부여 하였는데 이중 전주는 기술한 바와 같이 8중권중의 하나로 공업과 농업기능을 갖는 금강유역권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개발이 매우 더디게 되었다.

그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이 수립되면서 전주는 15개의 성장거점 도시로 지정되고 제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듯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1986년에 수립한 수정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7~1991)에 의하면 전국을 공업의 적절한 배치와 定住체제의 재정

립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목적으로 또 다시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묶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은채 단지 중소도시의 廣域開發이라는 이름하에 전주-군산-이리를 連擔都市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 3도시에 대하여 개별도시 기능을 特化하면서 광역적이고 상호보완적 연계개발을 추진한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다시 말하여 전주는 이웃의 광주와 대전의 개발계획을 오가며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작년도에 실시된 환경청의 기구확장때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정부에서는 환경청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및 원주에 환경지청과 제주에는 출장소를 두어 기존의 6개 측정사무소와 14개공단 상주 지도점검반을 통합함으로써 수계권역별 환경관리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각 도마다 환경지청이 설립되었지만, 유독 전북과 충북만이 지청의 설립이 제외되었다. 발표된 바와 같이 환경지청의 역할은 주로 水系 및 대기영향원 별로 권역내 오염도 측정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함께 중앙 환경행정의 집행 및 확인과 특히 지역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대책수립, 지방자치단체 및 배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등 권역별 환경업무를 조정지도 하도록 했고 환경종합계획을 우선했다.

환경지청이 설립되기 전, 우리 전북지방에는 전주지구 환경지도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곳 주민들은 마치 전라북도든 무슨 점점을 받는 대상인가 라는 피해의식을 간직했었는데 이것마저 환경지청이 설립되면서 철수되고 말았다.

사실 환경지청이 타도에서처럼 전북도에도 있어야 되는가 하는데는 다소 의문을 제기할수도 있으므로 본지면을 통해 이 지역에 환경지청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로, 이곳 지역주민에게 주는 인식은 마치 뭔가 정부로부터 소외를 받는 기분이 대단하다.

더우기 요즈음 선거에서처럼 지역적 감정으로까지 해석하려고까지 한다.

둘째로는, 환경지청의 설립목적중 하나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시책수립인데 전라북도든 지리산 국립공원을 위시하여 내장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등 3개소의 현존 국립공원과 내년에 국립공원으로 확실히 된 변산반도를 포함하여 4개소의 국립공원급 관광지가 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난 자연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일인 금만평야의 농지보전과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가 전라북도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 개발되기 전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전계획 수립이 요청되는 지역이다.

셋째로는, 우리나라 경인지역과 동남해안 공업벨트의 포화로 말미암아 공업단지의 개발추세가 서서히 전북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내수와 중공과의 교역을 내다보고 군산을 산업기지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벌써 대우자동차에서는 군산에 200만평 규모의 자동차 관련공장 설립을 교섭하고 있으며, 기아산업과 삼성에서도 이 지역에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서 공업이 더 발달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전북은 활발한 서해안지구 간척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서 새 금만간척지의 개발,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간척지의 개발은 이 지역에 환경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바라고 있는 곳이다.

“산은 사람을 분리시키고 물은 사람을 끌어 들인다”라는 말이 있다. 전북과 전남은 그 중간에 노령산맥이 있어서 양도를 크게 구별짓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남북은 모두 전주의 관할구역 이었다. 또 금강은 충남과 전북을 행정구역상 갈라놓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산과 강을 경계로 하여 행정 관할을 구별짓는데 불과하다.



그런데, 사실 금강의 수원은 전북의 무주, 진안, 장수이고 하류지방은 전북의 익산, 옥구, 군산 지방으로 금강유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주문화권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요즘 금강이 마치 전라북도와 관계가 적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대전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금강유역이 일부 대전권으로 흡수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내년중에 금강하구 특이 완성된다면 금강은 배후도시로써 명실공히 군산이 그 중심도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작년에 정부에서 환경지청을 설립할 때 배경이 된 水系別 환경관리에 의한 환경지청의 설치 취지는 재고되어야 하리라 본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구역의 변경없이 유독 전북의 환경관리를 이오도인 대전지청과 광주지청에서 분할관장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라 본다.

국토공간 구조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여건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발의 역학으로써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지역은 발전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대한 개발정책에 그 방향을 맞추었을 때 그지역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처럼 정부의 대폭적인 직제개편에서 각 도별로 환경청 지방청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전북도와 충북도만이 빠져 있는 것은 이러한 개발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우리나라 도시의 입지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강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도시가 많다. 대구, 대전, 광주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문화권이나 지역세력권이 형성된 바도 없다. 한강문화권이나 낙동강문화권 혹은 금강문화권으로 부르는 예가 없다. 단지 강이나 산은 행정구역을 정하는 의

미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1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전국도를 4대강 유역권으로 개발을 추진했었으나 이후 水系 유역권 중심개발의 방향은 전환되어 소위 성장거점 도시를 지정하고 나서 그 배후를 포함하여 개발코자 시도했다.

그리고 최근 수정한 우리나라 국토의 종합개발 방안은 지역경제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등과 같이 권역구분을 하는데, 환경관리만 水系別로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구상은 1981 년도에 세운 10개년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주를 비롯하여 15개 성장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후, 정부에서 수정한 계획(1987~1991)에 의하면 수자원 이용에 관한 국토계획 권역을 10대유역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안성천, 삼교천, 만경강, 동진강, 형산강)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중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북의 2대 水系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구분한 水系別 환경관리의 큰 흐름에는 왜 포함이 안되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전주는 전주-이리-군산을 連擔都市로 규정하고 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80 만의 인구를 갖는 하나의 도시역할을 갖고 언젠가는 대전권과 광주권을 흡인할 수 있는 명실공히 서해안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어차피 水系別로 환경관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이 발견되므로 현재 6개의 지방 환경지청을 제2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전북과 충북을 추가하여 전국에 8개의 환경지청을 두고 水系別 환경관리 시책을 행정관리 체제에 맞춘 도별관리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즘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지역간의 불균형 내지는 소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